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 목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충북도는 법 위반 의
 혹 먼저 해소해야
 날 짜 2025. 4. 22(총1쪽)

< 논 평 >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충북TP 원장 후보자, 충북도는 법 위반 의혹 먼저 해소해야

내일(4월 23일)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사전 내정설과 전문성 부족 문제에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및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충북도는 제기된 도덕적 법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임명 과정을 멈춰야 한다. 이는 충북도 인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후보자의 법 위반 의혹이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 후보자가 언론사 재직 당시 특정 기업과의 자문 계약을 통해 수년간 수익을 올린 것이 사규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은 법적 판단의 영역에 들어선 중대한 문제이다. 후보자의 법 위반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인사를 강행하면 이후 법적 판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충북도지사와 충북도, 충북테크노파크가 감수해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후보자가 당시 언론인으로서 직무윤리와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언론은 시민을 대신해 권력을 감시하고, 공공성을 수호하는 사회적 책무를 가진다. 후보자가 당시 자문 계약을 맺은 기업과 언론인으로서 이해관계가 상충하지는 않았는지 언론의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는 후보자가 그 직위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인사는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한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는 이미 사전 내정설이 파다했고, 충북테크노파크 수장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추었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는 충북도 행정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이다. 이번 논란을 상식적으로 바로잡아 충북도 인사행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끝.